

사업구분	완료종료	완료지속추진	추진중 (추진율(%))	목표연월	담당부서	비고
약속	-	-	35%	2022. 7.	복지정책과	

1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2년 예정
- 사업대상
 - 국민기초수급 생계급여 신청·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부적합된 노인가구
- 사업내용
 - 수원형 생계급여 지원 : 단독노인 248,349원, 부부노인 446,424원
- 소요예산 : 729백만원 (단위 : 가구)

구 분	계	단독가구	부부가구	비고
2020년 부양의무자 초과 부적합 가구	75	67	8	

※ 산출근거 : (생계급여-기초연금) × 인원 × 12월

- 단독가구 : (548,349원-300,000원) × 67가구 × 12월 = 199,673천원

- 부부가구 : (926,424원-480,000원) × 8가구 × 12월 = 42,857천원

※ 수급(권)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확정

- 재원 확보방안 : 전액 시비

2.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소요예산 (a~g합계)	기투자 (a)	2018.7월~12월		2019년		2020년		2021년		2022.6월까지	2022.7월이후
			확보	집행(b)	확보	집행(c)	확보	집행(d)	확보(e)	집행	계획(f)	계획(g)
계	729	0	0	0	0	0	0	0	0	0	729	0
국 비	0											
도 비	0											
시 비	729	-	-	-	-	-	-	-	-	-	729	-
민간자본	0											

【변경사유】

-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연도별 변경(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)으로 사업 규모 및 대상 축소

3. 연도별 성과지표

성 과 지 표		단위	2018	2019	2020	2021				2022. 6월까지	2022. 7월이후
				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	
당 초	타시 벤치마킹추진		√								
	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실시			√	√						
	지원조례 및 지침 신설								√	√	
	복지사각지대 해소율 증가								√	√	
변 경	중앙정부 제도개편에 따른 정책변화 검토								√	√	
	지원조례 및 지침 신설										√
	복지사각지대 해소율 증가										√
누적 추진율	목표	%	10	25	35	35	35	35	35	40	40
	현재	%	10	25	35	35	35	35	35		

【변경사유】

- 보건복지부가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.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추진으로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

4. 성과지표별 추진사항 (2018. 7. ~ 2021. 12. 31.)

성 과 지 표	추진 현황
타시 벤치마킹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8.10.31. “광주형 기초보장제도” 벤치마킹 / 광주광역시청 • 2018.11.14. “시민행복보장급여지원” 벤치마킹 / 대구광역시청 • 2018.11.21. “세종형 기초생계지원” 벤치마킹 / 세종특별자치시
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SRI-정책-2019-23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

5. 추진성과

-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 타 지역 벤치마킹 추진 및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로 제도 신설 시 시행착오 감소

6. 「2021 상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」 추진 실적

개선 및 제안사항	추진실적(추진계획 포함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금성 복지정책은 한계성이 있어 오히려 일자리 보장 정책 확대하는 부분 건의 • 정부 시책과 상충 여부 검토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.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정책 변화로 수원형 기초보장제도 재검토

7. 자체평가 결과

【문제점】

-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2021.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등 정책변화로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(약속사업) 추진 근거가 미약해져 재검토 필요
- (중앙정부)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
 - (2021년) 생계급여 노인, 한부모가족 수급(권)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 - (2021.10.01.)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 - ☞ 단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존립 근거 축소
 - (2022.01.13.) 2022년 특례시 출범으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
- (타 지자체)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방안 개선 등 검토 추진
 - (서울시)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실시
 - (부산시)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추진
 - ☞ 대상자 발굴 저조 등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증가
- 코로나-19로 인해 대면 상담 및 설문조사 등 이루어지지 못해 복지사각 지대에 대한 연구 지연
- (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) 지자체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 지양
 - 현금성 복지를 자제하고, 지역특화형 서비스 개발에 주력 필요
 - *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발족('19.05.27.)

【임기내 미완료 사유】

- 중앙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추진을 유보하고 재검토

【대응방안】

- 2021.10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

8. 향후계획

- 수원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및 추진 여부 검토 보고(2022.07.)

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			
담당부서	직(직급)	성 명	전화번호
복지정책과	복지정책과장	최승래	2461
	생활보장팀장	신용남	2264
	주무관	강아름	2265
협조부서	직(직급)	성 명	전화번호
복지협력과	복지협력과장	임유정	2120
	휴먼복지팀장	최명희	2485
	주무관	이은주	3222